

민주全大 10월 3일 인천 개최 확정 불구

계파간 힘겨루기…‘룰’ 논의 시작도 못해

쇄신연대, 이미경 사퇴 촉구
당 비대위는 사무총장 유임

민주당이 전당대회 날짜를 확정하고 전대 준비와 추가 인선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룰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못하는 등 전당대회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문희상)는 11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오는 10월3일 인천 문화경기장에서 전대를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김유정 홍보분과 위원장이 전했다.

당 전대준비위는 또한 김민석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당현당규분과 위원장에 조성준 전 의원, 당무발전분과 위원장에 김동철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일주일 간 전대 슬로건을 공모키로 했다.

하지만, 계파 간 협력루기로 정작 중요한 전대 룰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비주류 연합체인 ‘쇄신연대’ 측이 이미경 사무총장의 사퇴를 거듭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총장이 버티면서 전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쇄신연대가 이 사무총장의 퇴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정세균 전 대표가 임명한 이 사무총장이 전당대회준비위 총괄본부장이면서 조직강화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우선, 전대준비위는 준대 룰을 만들고 과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당

권주자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조직이다.

또 조강특위는 전국 245곳의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며 특히 사고 지구당을 지정하고 그곳의 기존 지역위원회를 교체할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위원회다.

따라서 비주류 측에서는 이 사무총장이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쇄신연대 소속 의원들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면담, 이 사무총장의 거취 문제를 재차 제기하여 했으나 억울함을 우려해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쇄신연대 한 의원은 “비대위에서 전대를 잘해야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며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시간이 없다며 떨어지기를 하려는 저의가 있는 게 아닌지 의

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같은 비주류 측의 반발에도 당 비대위는 이날 이 사무총장의 유임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전날 “비대위원장 중 이 사무총장의 유임에 찬성하는 분들이 더 많았다”며 “필요하면 표결이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당내 분단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1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희망쇄신연대 주최로 열린 민주당 쇄신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당원이 대표·최고위원 직접 뽑아야”

김영술 변호사 ‘민주희망쇄신연대’ 토론회서 지적

민주당 비주류 결사체인 ‘민주희망쇄신연대’가 11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도부 선출 등에 당원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현 민주당 체제의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지적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사항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의 대표 선출 방법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어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영술 변호사는 “정당의 당권은 당원에 있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러나 민주당 당원은 대의원 선출 참여 자체가 제한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현재의 민주당 당헌당규는 대의원 선출 권한을 각 지역의 상무위원회가 갖고 있으나 상무위원회는 대의원들이 선출하는 모순된 구조로 되어 있어 당원들의 참여가 제한된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는 당원이 주인인 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원들이 직접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원 투표제’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 기구인 중앙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위원 중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임명하는 위원회가 절반 이상을 차지

해 ‘사당화’ 내지 ‘제왕적 대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민주적 절차를 통한 기구 구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慈悲本位’지적을 받고 있는 당직자 문제와 관련, 당직인 사구조 혁신과 정책연구소 정상화, 조강특위 정상화, 투명한 예산과 구조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 대표 선출 방법의 하나로 제시된 ‘전당원 투표제’가 당원이 많은 호남에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토론자로 참석한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는 국민이 많으며,

당세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동원경선의 폐해인 ‘유령 및 종이당원’ 논란에 대해서도 “투표참여 신청을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도록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한다면 동원경선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한, “당권과 대권이 분리되지 않는다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대표가 공천권을 자신의 대권 가도에 이용할 수 있다”며 “또 현재의 단일지도체제가 유지된다면 대표 경선에서 탈락한 인사들의 당무 참여는 제한되고 외부의 참신한 인사들의 영입이 어려워지는 등 당에 독이 될 것”이라며 당권과 대권의 분리를 주장했다.

한편, 시사평론가인 고성국 박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집단지도체제 도입과 당권·대권 분리를 통해 경쟁구도를 디자인화로 유도, 계파 갈등을 수렴하고 당내 대권 주자들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대의원 잡아라”

민주 당권 후보들 호남표심 공략
전체 20%…투표율 높아 판세 좌우

또한, 당 대표 도전에 나설 것으로 확실시 되는 손학규·정동영·상임고문 등도 측근들이 일찌감치 광주·전남 대의원들을 접촉하는 등 물밑 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도전을 선언한 김효석 의원이 최근 8·8 개각과 관련해 영남편중, 호남 소외 인사라고 지적한 것도 광주·전남 대의원 민심을 어느 정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혁 성향의 재선의원으로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최재성 의원은 “광주·전남 대의원들이 선거기간 절반은 광주·전남에서 머물며 대의원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 출신으로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장성민 전 의원은 “광주·전남은 민주당엔 소중한 자산”이라며 “광주·전남 대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책임감이 필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당권 도전 후보들은 대의원 가족의 애경사 등을 쟁기는 등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더구나 당권레이스가 본격화하는 다음달부터는 당권 도전 후보들의 광주·전남 방문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8·8개각 청문회 23~25일 연다

여야 일정 합의

‘8·8 개각’에 따른 국무총리 후보자와 7개 부처 장관 및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3~25일 일정으로 개최된다.

국회 각 상임위는 11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인사청문회 일정을 이같이 확정했다.

각 상임위에 따르면 이재오 특임 장관 내정자를 비롯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이재훈 지식경제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3일 일정으로 열린다.

또 기획재정부는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9일 또는 23일 개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여야 간사 간 청문회 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3일 개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환경노동부는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일 열기로 했으나 당일 다른 상임위 청문회가 접종됐다는 점을 고려해 20일로 앞당겼다.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가 23일을 끝으로 마무리되면 24~25일에는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성희룡 의혹’ 고창군수

검찰, 무혐의 처분

전주지검 징집기정은 이강수 고창군수가 계약직 여성 공무원을 성희롱했다며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창군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A(23)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 군의장실 등에서

이 군수와 군의회의장이 “누드 사진을 찍자”고 수차례 제의해 성적 모욕을 느꼈다며 경찰과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또 이 군수 측이 A씨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북경찰도 앞서 지난달 이 군수에 대한 고소건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해 사건을 종결했다. 이로써 이 군수의 성희롱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경찰의 무혐의 판단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무등빌딩임대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 연설, 리더십, 설득력 향상과정

1 교육목표 : 대중 및 상대에게 강명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피치 교육을 통해 리더 및 지도자로서 품위를 갖게 하는데 있음.

2 모집인원 : 50명 선착순

※ 지원대상 : 직장인, 일반인, 주부, 기업제작 및 학생, 말을 잘하고 싶은 사람

3 강의요일 및 시간

- 이전에 주인인 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원들이 직접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원 투표제’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 기구인 중앙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위원 중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임명하는 위원회가 절반 이상을 차지

- 이전에 주인인 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원들이 직접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원 투표제’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 기구인 중앙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위원 중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임명하는 위원회가 절반 이상을 차지

- 이전에 주인인 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원들이 직접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원 투표제’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 기구인 중앙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위원 중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임명하는 위원회가 절반 이상을 차지

- 이전에 주인인 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원들이 직접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원 투표제’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 기구인 중앙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위원 중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임명하는 위원회가 절반 이상을 차지

- 이전에 주인인 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원들이 직접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원 투표제’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 기구인 중앙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위원 중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임명하는 위원회가 절반 이상을 차지

- 이전에 주인인 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원들이 직접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원 투표제’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 기구인 중앙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위원 중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임명하는 위원회가 절반 이상을 차지

- 이전에 주인인 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원들이 직접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원 투표제’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 기구인 중앙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위원 중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임명하는 위원회가 절반 이상을 차지

- 이전에 주인인 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원들이 직접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원 투표제’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 기구인 중앙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위원 중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임명하는 위원회가 절반 이상을 차지

- 이전에 주인인 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원들이 직접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원 투표제’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 기구인 중앙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위원 중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임명하는 위원회가 절반 이상을 차지

- 이전에 주인인 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원들이 직접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원 투표제’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 기구인 중앙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위원 중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임명하는 위원회가 절반 이상을 차지

- 이전에 주인인 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원들이 직접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원 투표제’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 기구인 중앙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위원 중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임명하는 위원회가 절반 이상을 차지

- 이전에 주인인 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원들이 직접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원 투표제’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 기구인 중앙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위원 중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임명하는 위원회가 절반 이상을 차지

- 이전에 주인인 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원들이 직접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원 투표제’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